

# 연체 전이라도 상환연기... 취약계층, 빚 90% 탕감

<최대>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워크아웃 시작 전 감면율 70%까지 성실 상환한 소액채무자는 면제도

앞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갚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 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가 90일이 넘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채무원금 감면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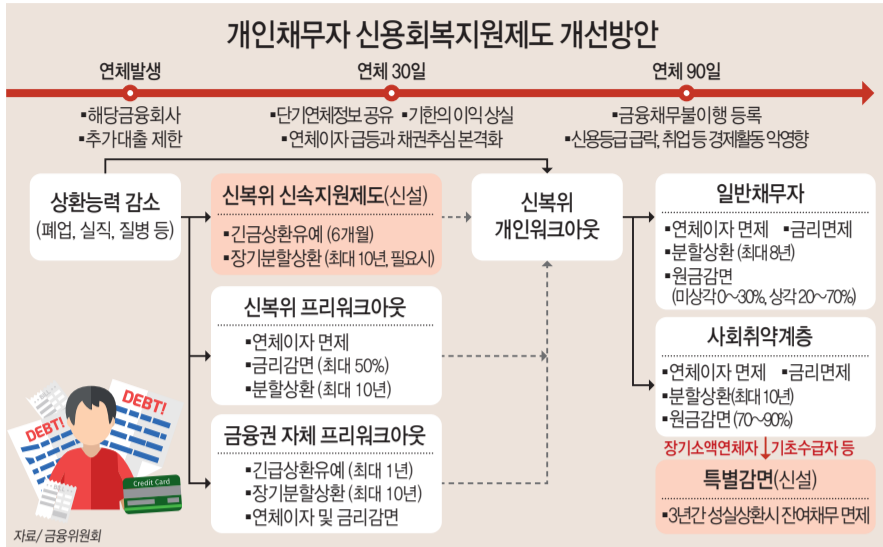
취약계층 등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이마저도 일정 기간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연체 전부터 상환능능 단계까지 사각지대없이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만든데 중점을 뒀다.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지금까지 모든 채무조정은 연체를 하고 30일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해 연체부담이 급증한 이후다.



정부는 연체 30일 이전의 신용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대상은 연체 전부터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다중채무자 중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 인정 등이다.

이들은 원금상환이 6개월간 유예되며, 약정금리대로 거치하지만 내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과도한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긴급 상환 유예 외에 추가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신불자,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빚을 못 갚은지 90일이 넘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범위를 확대해 준다.

금융회사들은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상각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하기 전까지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도 이자 등만 면제해줄 뿐 원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으로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을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분에 대한 손비 인정 여부를 기재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감면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인다.

### ◆상환능력 없다면 원금 최대 90% 탕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상환이지만 보여주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마련했

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의 특별감면율을 적용한다.

남은 채무도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했다면 면제해준다. 다만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개인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45%까지 확대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오는 3~4월 중 조기 시행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겠다"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금융위 "채무감면율 45%까지 올라갈 것"

### 일문일답

#### 평균 상환기간도 5년 미만으로 단축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가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 준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제 때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증가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미상각채권 포함 시)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대 상환 기간과 관련해서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감면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평균 상환기간이 6년 4개월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의 일문일답.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선 감면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소액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장기소액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 건별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을 합산해 1500만원이다."

- 지난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10년 그대로다. 너무 길지 않은가.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금의 최대



금융위원회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룸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90%를 탕감해 준다. 반면 신속위 채무조정제도도 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간을 설정한다. 감면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평균 상환기간은 6년4개월에서 5년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비율은 29%다. 이번 방안으로 얼마나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상각채권까지 도입할 경우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보았듯이 감면해줬음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실효 및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우선 채무자 상황에 맞는 때에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초반에는 제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탈락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돼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상환하며 재기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유리 기자 yul15@

**SolutionPartner**

## 내일을 만드는 화학

언제까지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  
깨끗한 물을 남기는 것이 왜 지구의 숙제가 되었을까  
끝없는 도전으로 끝없는 물을 만들자  
마르지 않는 내일의 자원을 만들자

지구의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수처리 솔루션  
LG화학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미래자원인 물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화학**